

기술·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금융감독 과제

최 수 현 (금융감독원 원장)

1. 들어가는 말

기술발달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금융감독의 방향과 범위도 계속 바뀌게 된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정보보안과 관련한 금융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은 1999년 7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뱅킹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예금 조회, 입출금, 자금이체 등 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창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면서 최근 들어서는 은행거래에서 인터넷뱅킹의 비중이 창구거래에 비해 약 3배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준 인터넷뱅킹은 다른 한편으로는 해킹, 피싱 등 새로운 금융범죄 또는 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보보안은 금융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회사들이 소액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간 융합이 진전되어 금융이용의 편리성이 보다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안상의 취약성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에 대응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전통적인 목적 외에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최근 동양그룹사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을 겪으면서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금융감독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바, 향후 금융감독원이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의 방향은 크

1) 2014년 3월중 채널별 은행거래비중은 창구거래가 11.3%, 인터넷뱅킹이 34.5%, CD/ATM이 41.2%, 텔레뱅킹이 13.0%를 차지하였다(한국은행 보도자료, 2014-5-13호).

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그 동안 ‘각 경제주체의 합리성’에 근거한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실수(predictable mistake)를 반복하거나, 비합리적 행동편향(behavioral bias)을 가지고 있다는 행동경제학에 근거한 소비자보호 방법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당국이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은 복잡하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방식과 수준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즉,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판매시점 이후부터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금융상품의 설계단계부터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도 종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prudential regulation)에서 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까지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금융트렌드에 대응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뱅킹, 앱카드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SNS와 결합한 지급결제서비스 도입이 모색되고 있는 현상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금융혁신과 접목되면서 금융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 혹은 탈취되는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이 커지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이에 따르는 리스크와 소비자 피해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외부경제²⁾(externalities)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기술·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감독·규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다.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방 금융감독시스템」(Financial Risk Early Identific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들어서는 금융현장의 위험요인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동검사체제 구축, 각종 불건전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재의 실효성 제고, 금융회사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 금융감독 정보의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2절에서 금융소비자의 비합리적인 행동편향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금융소비자 보호 추세와 소비자보호 중심 금융감독 패러다임 변화에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3절에서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혁신 및 금융감독상의 각종 이슈와 함께 효과적인 정보보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및 향후 과제를 짚어 본다. 제4절에서는 기

2) 정보보안 시스템은 모든 참가자가 다 같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반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개별 회사가 지출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외부효과 사례로 지적된다(Moore and Anderson, 2011).

술·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감독·검사측면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보다 높아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감독수요에 부응하여 금융감독원이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제5절에서 마무리한다.

2.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간의 ‘효율적 금융시장’, ‘합리적 시장참가자’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시각에 따르면, 금융감독·규제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을 보완하는 선에서 개입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에 자금조달 비용과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상품의 내용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은 중요한 가격정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가격비교 수단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표 1> 금융시장 참여자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 가격책정시 자금조달 비용, 금융시장의 위험요인 등을 체계적·합리적으로 반영	• 금융거래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정보를 충분히 이해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등 시장참가자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수익과 위험간 상충관계를 누구보다 잘 계산할 것으로 믿어졌던 국제적인 대형 금융회사가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외형경쟁에 치중하다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금융소비자의 경우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하기 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금융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현상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결국 시장참가자들은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매매되는 상품의 가격과 구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보장된다는 이론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어긋나게 되었다.

<표 2>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시장 및 참여자의 비합리성

금융시장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창출된 복잡·다양한 구조화 상품들이 금융위기를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과 위험의 trade off 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차입을 통해 외형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소비자의 경우 당장의 이익만 보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상품판매시점 이후에 개입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상품설계, 가격책정, 목표고객 선정 등 판매이전 시점에 대한 감독³⁾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3> 금융시장에서 경쟁의 유효성이 악화되는 주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비교·선택시 어려움이 커졌고, 공시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군집행동에 빠지는 소비자들도 상당수 존재 • 보험·연금·주택대출 등 금융회사를 교체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불만사항을 개선하도록 경쟁압력을 행사하기 곤란 • 금융회사들이 가격체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도 존재
--

또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이 이루어지도록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재설계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영국 영업행위감독청(FCA)의 영업행위 위험 조기인식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CA Risk outlook) 거시변수, 시장흐름, 규제감독 제도, 소비자 성향 및 행태 등 영업행위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발표 • (BMSA ; Business Model and Strategy Analysis) 시장차원의 영업행위 위험이 개별 금융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모델 등을 분석 • (행태 분석) 영업행위 위험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금융회사의 행태분석도 병행
--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금융감독원은 그간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소비자보

3) 금융상품 공시정보의 필수요소, 판매채널 등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상품구조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요소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고객에게 유리한 특정요소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상품설계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FCA, 2013).

호를 사전적 피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012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준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소비자보호제도를 전면 재정비하였으며, 특히 2013년 7월에는 ‘민원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금융상담이나, 민원동향 분석을 통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모니터링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발생한 KIKO파동⁴⁾과 최근 발생한 동양그룹사태⁵⁾는 금융감독원이 법규위반 여부만 따지는 감독·검사방식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생상품 등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상품내용 및 손실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여하였고, 설명누락이나 왜곡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가 위험을 본능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노란색, 주황색, 적색 경고문⁶⁾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어왔다. 은행권 여수신 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금리정보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고, 맞춤형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금리,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3년중에는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부 대출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하였으며, 예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었다.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비합리적 행동편향이나 실수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사전적 소비자보호방안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시점 이전에 이루어지는 가격책정, 상품설계 등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구축하고 있는 각종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불합리,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합성통화유통상품인 KIKO는 2006년부터 중소기업에 판매되기 시작하여 2008년 환율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하자 계약기업에게 큰 손실(2009년 8월 기준으로 3조 3,528억원)을 입히게 되었다. 피해 기업은 손실발생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은행에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였다.

5) 동양그룹사태가 발생한 2013년 9월말 기준 동양증권이 투자자(4.1만명)에게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 CP·회사채 등의 잔액은 1.7조원으로, 피해 고객들 상당수가 불안전판매 등을 이유로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였다.

6) 노란색은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주황색은 손실범위가 무제한인 경우, 적색은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면서 투기성이 높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융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실수 및 편향들과, 이러한 편향들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감독·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른 금융감독상의 대응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실생활을 변화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금융분야에서의 혁신을 창출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의 페이팔(Paypal)⁷⁾과 중국의 알리페이(Alipay)⁸⁾의 지급결제서비스에 이어 조만간 페이스북(Facebook)이 금융서비스업에 진입할 예정이며, 구글(Google)은 구글글래스에 구글월렛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의 지급결제시장 진입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관련 법규상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소액지급결제업에 비금융회사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점차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지 여부가 불분명한 분야(grey zone)를 중심으로 서비스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비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업 진출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은 다수의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와 감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직접적인 금융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거래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외 자금이체 또는 지급결제 등의 서비스가 규제회피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절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언제부터 규제를 시작할 것인지, 어느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시장에서 광범위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 소비자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시장규율을 확립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금융산업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당분간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허용하되 일정수준으로 확장되면 규제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주요국의 새로운 금융트렌드에 대한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결과⁹⁾ 등을 반영하여 대응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7) 페이팔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자, 마스터 등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간 소액송금,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 알리페이는 중국관광객이 롯데면세점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하나은행, KICC)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바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 BIS내 지급결제위원회는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비은행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Non-banks in retail payment systems)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금년중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표 5> 선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론

<先규제>	<後규제>
① 사각지대로 인해 금융시장에 부정적 파급 효과 발생 우려	① 불확실성 및 변화 가능성을 모두 예측·관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②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와 비금융 회사간 규제형평성 논란 야기	② 자칫 기술발전과 창의성(창조경제)을 저해할 우려
③ 선제적으로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촉진	③ 또 다른 규제회피 서비스를 양산할 가능성
④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모와 협상력이 커지면 사후적인 통제가 어려움	④ 현재 보유한 수단(약관·보안성 심사)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해 금융혁신이 이루어지고 금융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반면에 개인정보의 유출 등 금융사고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산업에 있어서 적정하고 효과적인 정보보안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금융감독당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정보보안기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띄는데 반해, 기술투자는 개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외부성(externalities)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 정보보안 수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 항상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보보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감독당국이 최소 기준을 정하여 금융회사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압력에 의해 개별 금융회사가 정보보안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도 활용된다.

금융감독당국이 2014년 3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발표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보관기간 단축 및 금융사고시 금전적, 물리적 제재 강화 등 책임성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것도 이러한 외부성에 의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MS 신용카드를 IC chip 신용카드로 전환하고, POS단말기에서 MS 결제 IC결제로 유도하기 위해 IC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은 개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높아진 정보보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개입하여 금융회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정보보안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회사 스스로 정보보안 수요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금융감독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금융감독원은 최근 다수의 금융부실사태 경험을 통해 문제가 터지고 난 후 사후 해결에 급급했던 그간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금융시장내 위험요인이 현재화되기 전에 이를 인지하고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금융상품정보시스템」 및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은 (1) 위험요인 점검과 정보 공유, (2)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3) 분석결과를 감독 및 검사에 적용하고, 금융시장에 전파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악된 위험요인을 금융감독원 내부 협의채널을 통해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권역간 전염위험이 있거나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잠재위험요인을 판별해 내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뒤따르게 된다. 분석된 내용은 감독 및 검사업무에 활용되며,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업무협조와 정책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2014년초 적발한 KT ENS관련 대출사기사건¹⁰⁾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2013년부터 구축·운영중인 「저축은행여신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적출한 이상징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형 대출사기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발견한 사례이다.

<표 6>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체계도



10) ㈜KT ENS의 납품업체(8개사)가 ㈜KT ENS 내부직원과 공모하여 2008년 3월경부터 ㈜KT EN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 2008년 3월경부터 2014년 1월까지 14개 금융회사에서 약 1조 9천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 미상환잔액(피해금액)은 12개 금융회사(3개 은행 및 9개 저축은행), 약 2,900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검사방식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검사 및 제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대출사기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검사 및 제재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기존 업무관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진단한 결과, 리스크 취약부문과 잠재위험요인을 미연에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현장의 위험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동검사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형 금융사고 및 다수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징후가 포착될 경우 금융권역별 구분 없이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검사국을 신설하였다. 또한 솜방망이 제재 등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온 점에도 주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대한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경영방침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계획임을 대내외에 표명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 대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2013년 5월 금융상품 약관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사전신고대상 축소, 약식 심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 결과 약관심사 처리기간이 종전 평균 23일에서 13일로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거둔데 이어, 2014년 5월부터는 금융회사 인허가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 신청당사자인 금융회사를 상대로 인허가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허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균질의 인허가 서비스를, 예측 가능하게, 적정기간 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인허가 사전협의제 도입·적용, 부서 내 실무자와 팀장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 단순한 인허가사항에 대한 약식심사(Fast Track) 제도 도입,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는 심사장구 일원화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인허가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인허가업무 처리기한이 단축되고, 처리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감독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¹¹⁾을 전면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융통계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가 금융감독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서비스¹²⁾”를 제공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정보 공개 대상 금융회사를 기존의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외국은행지점, 농·수·산림조합, 부동산신탁사를 추가하여 국민들이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

11)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 중에서 재무정보 등 금융통계를 뽑아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융통계정보 공개 전용 사이트로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12) 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데이터 원천정보에 대한 접근방법을 담은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공개하여 외부 이용자가 금융통계를 분석 또는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 공개대상 통계정보(통계표)도 현행 201개에서 505개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회사별, 시기별 단순 통계수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대출, 손익, 자기자본비율 등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대상으로 시계열자료와 변화추세 그래프까지 제공하고, 금융통계 이용자가 금융통계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투명하고 열린 금융감독” 실현을 위해 더욱 다양한 금융통계정보를 발굴하고 공개함으로써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5. 맺는 말

금융산업의 성장잠재력 확보,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향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금융소비자의 반복적인 실수나 행동편향까지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보호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특히 민원사전인지시스템에 의한 금융소비자 피해방지과 소비자경보 발령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대응하여 금융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감독·규제 수준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정보보안산업의 특성상 금융감독당국이 개입하여 개별 금융회사로 하여금 추가비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정보보안 수준을 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새로운 소비자보호 방식 채택, 정보통신기술업체의 소액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감독·규제, 정보보안의 최소기준 설정 등과 관련한 최적 감독·규제수준의 선택문제 등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어 금융혁신이 저해되고 규제준수 비용의 증가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상승¹³⁾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최적 규제수준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금융감독, 현장중심 검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 인허가 업무처리 개선 등 최근 금융감독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내용을 소개하였다.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을 통해 활기찬 경제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산업도 국민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자금중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스스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은 기본 성격상 시장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 수습하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처하여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3) IMF(2012), Estimating the Costs of Financial Regulation.

특히 최근 금융감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경기 및 금융순환(business and financial cycle)에 대응하는 정교한 거시건전성 감독(macroprudential supervision) 등 매우 복잡하고 전문화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공학의 발달에 따른 복합금융상품의 등장 등으로 금융업권의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도 금융감독에 있어 또다른 과제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기술·경제환경의 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금융·경제학계 및 업계에서도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는 올바른 금융감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FCA, “Applying behavioural economics at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Occasional Paper No. 1, 2013.
IMF, “Estimating the Costs of Financial Regulation,” 2012.
Tyler Moore and Ross Anderson, “Economics and Internet Security: a Survey of Recent Analytical, Empirical and Behavioural Research,” 2011.